

尹 탄핵심판 대신표 윤곽...진보 vs 보수 '창과 방패' 집결

국회 대리인단 '헌재' 출신 김이수·'특검' 출신 송두환·이광범 尹 수사대응 '강력·특수통' 김홍일·윤갑근...석동현 외곽 지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7일)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양측 대신표가 드러나고 있다. 국회와 대규모 대리인단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 측도 본격적으로 대리인단 구성을 추진하면서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17명 규모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꾸리고 대표로 변호사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임했다.

김 전 재판관(사법연수원 9기)은 2012~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소신이 뚜렷한 것으로 유명하다. 재판관 시절 '미스터 소수의 견'으로 불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관여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참여자들이 국헌 문란 폭동을 했다는 이유로

내란죄로 처벌된 '1980년 법정'과 그 이후 진실이 밝혀지면서 무자비한 진압에 관여한 전두환 신군부 등 핵심 책임자들이 내란죄로 처벌받게 된 과정을 다룬 저술이 담긴 고회 기념 논문집이 2022년 나오기도 했다.

송 전 위원장(연수원 12기)도 헌법재판관 출신이다. 대표적 진보 성향 법조인인 그는 판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냈고 2003년에는 대북송금 의혹 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다.

이광범(연수원 13기) 변호사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장, 인사실장, 사법정책실장 등 요직을 거친 '엘리트 법관' 출신으로 법무법인 LKB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이었던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이며, 2012년에는 특별검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했다.



시민과 함께 행진하는 트랙터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농민 행진 보강 축구 시민대회'에서 트랙터와 시민들이 경찰 차벽 철수 이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리인단 실무 총괄은 현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김진한 변호사가 맡았다. 주요 서면 작성과 변론 등을 도맡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대신표는 법조계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현재 출신 중심으로 대리인단 구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측에서 먼저 준비

를 완료한 모양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윤곽이 언제쯤 드러날지는 미지수다.

일단 수사 대응의 경우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 과거 인연이 있는 법조인이나 검사 출신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김 전 위원장(연수원 15기)은 강력통 검사로 출발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강력·특수통'이다. 윤 전 고검장(연수원 19기)도 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이어 3차장으로 2년간 재임해 특별수사에 정통한 인사로 평가된다.

헌재 탄핵심판 대응에 참여할 법조인 면면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헌재 출신을 포함해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동기로 '40년 지기'이자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연수원 15기)는 변호인단이나 대리인단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외곽에서 지원하고 있다. 일단 현재 변호인단·대리인단의 대외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박근혜 바로 받은 탄핵서류尹 언제쯤...헌재 '당혹'

다른 대통령들 바로 수령...첫단추 송달부터 애먹는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연일 거부하고 대리인 선임에도 제촉하지 않아 지난 14일 시작한 탄핵심판이 결말에도 떼지 못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식이다.

이는 앞선 대통령 탄핵 사건과 대비

된다. 현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했지만, 이번처럼 송달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다음 날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결 5개월 뒤인 3월17일 대리인단의 소송위임장 등의 서류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9일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헌재가 인편으로 약 1시간 만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송달을 끝냈다. 이후 7일 뒤인 16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탄핵의결서 현재 제출	탄핵심판 서류 송달	소송위임장 등 제출	선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04년 3월 12일	당일	1일 뒤 (3월 13일)	5일 뒤 (3월 17일)	63일 뒤 (2004년 5월 14일 탄핵심판 가결)
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 12월 9일	당일	당일 (12월 9일)	7일 뒤 (12월 16일)	91일 뒤 (2017년 3월 10일 탄핵심판 인용)
윤석열 대통령	2024년 12월 14일	당일	6일 뒤 (12월 20일 현재 서류 송달 거부)	-	-

탄핵심판의 1단계인 송달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 내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계속 송달이 안 되거나,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늦게 선임한 뒤 '준비가 되지 않았다'

고 주장하면 27일 예정된 변론준비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탄핵심판에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계속 수령을 거부하면 공식 송달·발송 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향후 절차적 흠결이나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가급적 신속히 관련 절차를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소송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것을 두고 앞으로의 재판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법조인은 "재판을 거부할 때에는 서류부터 안 받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부 입장에서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5일 성탄절尹 소환 통보

공수처, 수사 준비 속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흘 뒤로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휴일을 반납하고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일요일인 22일에도 대부분 출근해 윤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부터는 지난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한 내용,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கே 물을 질문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군·경찰을 투입했는지 규명해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형 방청사령관, 광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군 지휘부를 조사한 자료를 아직 공유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합의했지만, 사건 기록은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

자료 정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양측은 구체적인 공유 범위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 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우편은 월요일쯤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 보낸 전자공문은 아직 읽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25일 출석할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일단 공수처는 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햄버거 계엄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중앙군사법원 영장 발부...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이 지난 20일 구속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과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 중 하나다.

당시 정보사령관이 계엄 선포 2분 뒤인 오후 10시 31분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이 '계엄날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공수처는 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장·서울청장 '내란 혐의' 송치

검찰 특수본 수사 착수... '체포조' 동원 의혹 등도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 1·2인자인 조지호 경찰청장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어떻게 가담했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혐의는 없는지 등을 강도 높게 추가 수사할 전망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김 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긴급 체포된 뒤 13

일 구속됐다. 검찰은 송치된 조·김 청장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에 배당했다. 검찰의 구속 기간은 일단 오는 29일까지지만,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대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김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특수본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선관위에 출동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나, 계속해서 수사에 행위자별 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김 청장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경찰 인력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경찰, '스모킹건' 노상원 수첩 계엄계획 추궁

국회·선관위 '목표' 등 수첩 내용 주목... 통일부장관도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휴일인 22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상대로 그가 작성한 '수첩' 속 내용 등을 캐묻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을 불러 경찰이 그의 경기 안산 '집'에서 확보한 수첩에 적힌 군부대 배치 계획 등으로 추정되는 문구들의 구체적인 의미를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첩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군부대가 향한 목표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첩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을 둘러싼 의심 정황이 담긴 수첩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행방을 추

적하는 한편, 그가 계엄 이틀 전과 당일 이뤄진 '롯데리아 회동' 외에 군 관계자와 다른 계엄 모의 회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검찰 송치가 24일로 예정된 만큼, 23일까지 계속 노 전 사령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과 롯데리아에서 회동한 김도 전 대령(구속)도 이날 소환해 정보사령부 산하 북과공작부대(HID) 투입 경위와 선관위위원장 노태약 대법관을 체포할 계획이 실제 있었는지 등을 따져 묻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